

“집값 10%만 있으면 입주 가능

‘누구나 집 프로젝트’ 정책 추진”

차기 당권 도전
민주 송영길 의원

전북 찾아 “현재 인천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 전주서 추진토록 해볼 것” 제3금융도시 중요 과제 새만금 등 중요성도 강조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사진 오른쪽)이 10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10일 “당 대표가 되면 집값의 10%만 있으면 입주가 가능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민주당의 대표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인천에서 추진 중인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전주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인구가 사실상 줄어들고 있고 이 상황이 지속되면 지방에 가장 큰 타격이 온다”며 “해결책으로 기존 집값의 10%만 가지면 집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이 기존 집값의 10%만 있으면 바로 자기 집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돈을 투자하면 최초 분양가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라며 “은행에서 대출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에 따르면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적은 돈으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분양가격의 5~10%만 있으면 언제든지 최초 분양가격으로 주택 매입이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현재, 인천시가 1908세대를 ‘누구나 집 프로젝트’로 건립 중에 있다.

송 의원은 “은행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은 집값이 폭등하기 때문이다”면서 “은행에 빌린 이자를 내는 것보다 집값 상승 폭이 크기 때문에 집을 산다면, 언제든 최초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가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이런 구조가 되면 집값이 올라도 걱정이 없게 된다”

면서 “전북도 한번 시도해 볼만하며, 송하진 도지사를 만나 이야기 해 보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앞서, 탄소 소재 산업을 지역에 정착시킨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설 수익을 올린 김성주 의원을 칭찬하는데 할애했다.

이어, 제3금융도시와 탄소산업 등 전북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 통과와 행정성 문제 제기로 쉽지는 않겠지만 협의 과정을 통해 전북 제3금융도시를 자산운용의 중심 축으로 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지자체가 선도해 국가연구기관으로 위상을 높였다”고 강조하며 “미래먹거리로써 성장가능성이 높은 전북의 탄소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영길 의원은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의 확장, 2028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공항 건설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론하며 풍력·바이오·식품산업 클러스터로서의 새만금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 이후 송 의원은 민주당 전북도당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유호상 기자

“부동산 투기, 용납할 수 없는 일”

문 대통령, LH 직원 투기 관련... “공정·신뢰 훼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간담회에서 “지금 LH 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정부와 수사기관이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전북도는 10일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주재로 전주시와 완주군, 전북도교육청 및 13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순회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유기적 협업체계 유지

도, 농수산대학 시작으로 순회간담회 열기로 지역상생 발전사업 업무 협력사항 등 정보 공유

전북도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도는 이날을 시작으로 정기적 간담을 통해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10일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주재로 전주시와 완주군, 전북도교육청 및 13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순회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간담회인 만큼 공공기관별 ‘2021년 지역발전계획 대표사업 추진현황’ 공유와 함께 혁신도시의 발전방안, 협력사항 등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소통·협력을 강화해 지역발전에도 움이 되도록 하는 데 방점을 뒀다.

아울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재해분석센터’ 및 연구실증단지 조성 과 같은 굵직한 시설건립 사업부터 로컬푸드 소비체계 활성화 지원 등과 같은 지역상생 사업까지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한국식품연구원 이비대면 맞춤형 식품 건강관리 AI 융합솔루션 개발 사

업을, 전주시가 전주형 뉴딜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공공기관 선도·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에 적극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공기관별 지역상생 발전사업 주요 업무에 대한 상호 협력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전북도, 전주시, 완주군과 교육청 등이 공동 조성 중인 키즈복합센터와 혁신도시2중학교 설립과 같은 정주여건 개선 사업도 함께 공유했다.

또한, 전북투어패스,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과 같은 전북만의 특색있고 다양한 관광 시책을 홍보함과 동시에, 군산공항 이용,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등 지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우범기 도 정무부지사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서로 뜻을 모아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공공기관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해 공공기관 순회 간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개발청, RE100 기업 세미나 참석 투자 요청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10일 ‘한국 RE100 위원회’가 주최하고 더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이 주관하는 2021 한국 RE100 회원사 세미나에 참석해 새만금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으로, 지난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클라이밋 그룹에서 시작했다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주)SK, SK브로드밴드, SK하이닉스 등 한국 RE100 회원사를 비롯해 애플, 구글, 쓰리엠, 베스타스 등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 40여 곳이 참석했다.

기업들은 세계 최초의 RE100 산단과 저렴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투자환경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새만금을 미래 투자처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보다 전문적인 소방관 복지정책 심의 필요”

민주 한병도 의원, ‘소방공무원 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 의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방공무원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및 복지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위원회 구성이 10명 이내로 제한돼 있어 민간위원의 참여 부족, 상시적 회의 개최의 어려움 등 조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특히, 경찰과 달리 보건, 안전, 복지 등 각 분야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정책 심의가 이뤄지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한 의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소방청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민간위원의 참여 또한 확대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책심의위원회 내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심의가 가능하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청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해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 구급차량 합동점검 추진

전북도가 안전한 응급환자이송 체계를 조성하고자 구급차량 점검에 나선다.

도는 3월 한 달 동안 도와 시·군 및 전북응급의료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응급환자이송사업 5개 업체와 의료기관의 구급차 298대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인력기준 준수 여부, ▲응급구조사 미탑승 및 자격대여 여부, ▲구급의약품 및 의료장비 보유 여부, ▲구비대장 비치 및 기록 여부 등이다. /유호상 기자



민간조사 전문기업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010-5636-7755 907호